한일 관계 돌파구 모색한 박지원…'문재인-스가 선언' 주목

박지원 "한일 관계 정상화 의지 전달"

스가에 '징용 봉합' 정치적 결단 제안

일본을 방문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에게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정상급 선언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후 논의 과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산파 역할을 담당한 박 원장을 매개로 '문재인·스가 선언'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원장은 전날 스가 총리 면담 후 현지 취재진을 만나 "총리께 문 대통령의 간곡한 당부와 한일 관계 정상화 의지를 전달하고 대북 문제 등 좋은 의견을 들었다"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충분히 말씀 드렸다. 두 정상이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계속 대화하면 잘 되리라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스가 총리 취임 기념 한일 정상통화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일 정부와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찾자"며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만에 박 원장의 일본행이 결정됐다는 점에서 한일 당국 간 강제징용 해법을 중심으로 실마리를 푸는 식의 물밑에서의 사전 조율이 긴밀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이 스가 총리의 최측근 인사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박 원장을 특사로 활용하려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2000년 김대중 정부 문화관광부 장관 시절 당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일본 운수성(한국의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일 교류협력을 추진한 것을 계기로 20년 이상 '호형호제' 하는 막역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박 원장은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와 함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표했을 때도 막후에서 물꼬를 트는 역할을 맡았다.

박 원장은 당시 청와대 실세 공보수석으로 니카이 운수성 차관을 만나 협상 조건을 물밑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부치 총리의 식민지배 사과라는 대승적 결단을 토대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일 교류협력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상 간 선언을 이끌어 냈다.

이후 박 원장과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은 각각 문화부 장관과 운수성 장관으로 자리를 옮겨 한일 당국 최전선에서 본격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했다. 박 원장은 당시 일본 문화 개방에 저항적이던 국내 분위기 속에서도 일본 영화·음악 수입을, 니카이 간사장은 한일 항공노선 개발로 인적 교류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원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뒤를 이어 니카이 간사장 측근인 스가 총리 체제가 출범하자 문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 개선의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고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스가 선언' 추진 구상도 이 자리에서 전달됐고, 문 대통령도 힘을 실어준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스가 총리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새 해법 제시를 한일 관계 개선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마이니치는 '문재인·스가 선언' 구상과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선언에 따라 한일 간 현안이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반응을 보도했다.

여당에서는 지난해 제시됐던 '문희상 안(案)'이 논의 출발선으로 적합하다고 보는 기류가 강하다. 문희상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재단을 설립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절충안이다. 일본 역시 아베 총리 체제에서 거절했었던 문희상 안을 최근 들어 우호적인 반응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희상 안'에는 문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배제돼 있어 제2의 '12·28 위안부 합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秋, 윤석열 저격…"대권후보 1위? 사퇴하고 정치해야"

국회 예결위서 검찰 탈원전 수사 저격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야당이 고발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 전광석화처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전지검이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수사)하는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먼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던 2018년과 2019년 사이 동일사안을 중앙지검이 3건 각하를 한 적이 있다. 중앙지검 이외 대구와 경주 등에서도 동일 사안이 제기됐는데 또 3건이 각하됐다"며 "경제성, 안정성을 고려한 정책판단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무위배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고 그러면서 "(윤 총장) 본인이 중앙지검 재직 때 각하처분한 것을 정치적 야망을 표명한 이후에 (수사)한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정치적 목적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무혐의 각하처분 사유에서 든 것처럼 이것은 명백히 권력형 비리도 아니다"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거나 감사원에서 문제삼지 않은 청와대 비서관까지 겨냥해 청와대까지 조국 전 장관처럼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한다면 커다란 정권 차원의 비리가 있는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이 재차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다녀간지 1주일 만에 수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서둘렀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스스로 중앙지검장일 때 각하했다가 대권 후보로 부상하면서 정치적 야망을 표현함과 동시에 (빠른 수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에서 수사자료를 보냈다고 하지만, 대전지검에서 고발한 것은 아마 야당의 지역위원회인 것 같은데, 야권과 연동돼 전격적인 수사를 하고, 또 거기에 방문했다고 하는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 장관은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윤 총장이) 대권후보 1위로 등극했는데, 다분히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여겨진다"며 "검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라고 답했다.

뉴시스

장제원 "김종인에 당 존망 못맡겨"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1일 장제원 의원을 향해 "김종인이 싫다고 무조건 김종인 흔드는 쪽에 편들지 말고 내년 보궐 선거 승리를 위한 조언과 제언을 하라"고 했다.

이는 "떠나면 그 뿐인 김 위원장에게 당의 존망을 통째로 맡길 순 없다"고 한 장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 대한 반박이다.

장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신당 창당을 통한 '야권 연대론'에 찬성하면서 안철수식 연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김 위원장에 대해 연일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교수는 이런 장 의원에 "당을 흔들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안 대표의 야권연대론에 대해서도 '김종인 흔들기'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합, 연대, 복당 당연히 해야한다. 그러나 원칙이 있고 시기가 있고 순서가 있다"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장 의원 말대로 내년 보궐선거 승리다. 이를 위해 범야권 시민 후보를 멋지게 선출하는게 최우선 아니냐"고 했다.

이어 "그래서 국민의힘도 안철수 금태섭도 참여할 수 있는 완전 개방형 개방형 경선 방식, 국민의힘 후보 선출 후 당 밖 후보들과 단일화하는 2단계 시민후보 선출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누가 반대를 하나. 주호영 대표의 안철수 러브콜도 이런 맥락이고 김 위원장도 적극 찬성이다. 그런데 필승 카드 시장 후보 선출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왜 쌩뚱맞게 신당창당을 주장해서 오히려 야권 진영 내부의 분란을 초래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도 정작 절실하고 필요했던 금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 대통합은 거부하다 지금 뜬금없이 신당 창당 이야기는 누가 봐도 의아할 뿐이다. 그저 김종인 흔들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